



인구구조 변화현황 및 대응방향

정부(제3기 인구정책 TF)는

①인구감소, ②지역소멸, ③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① 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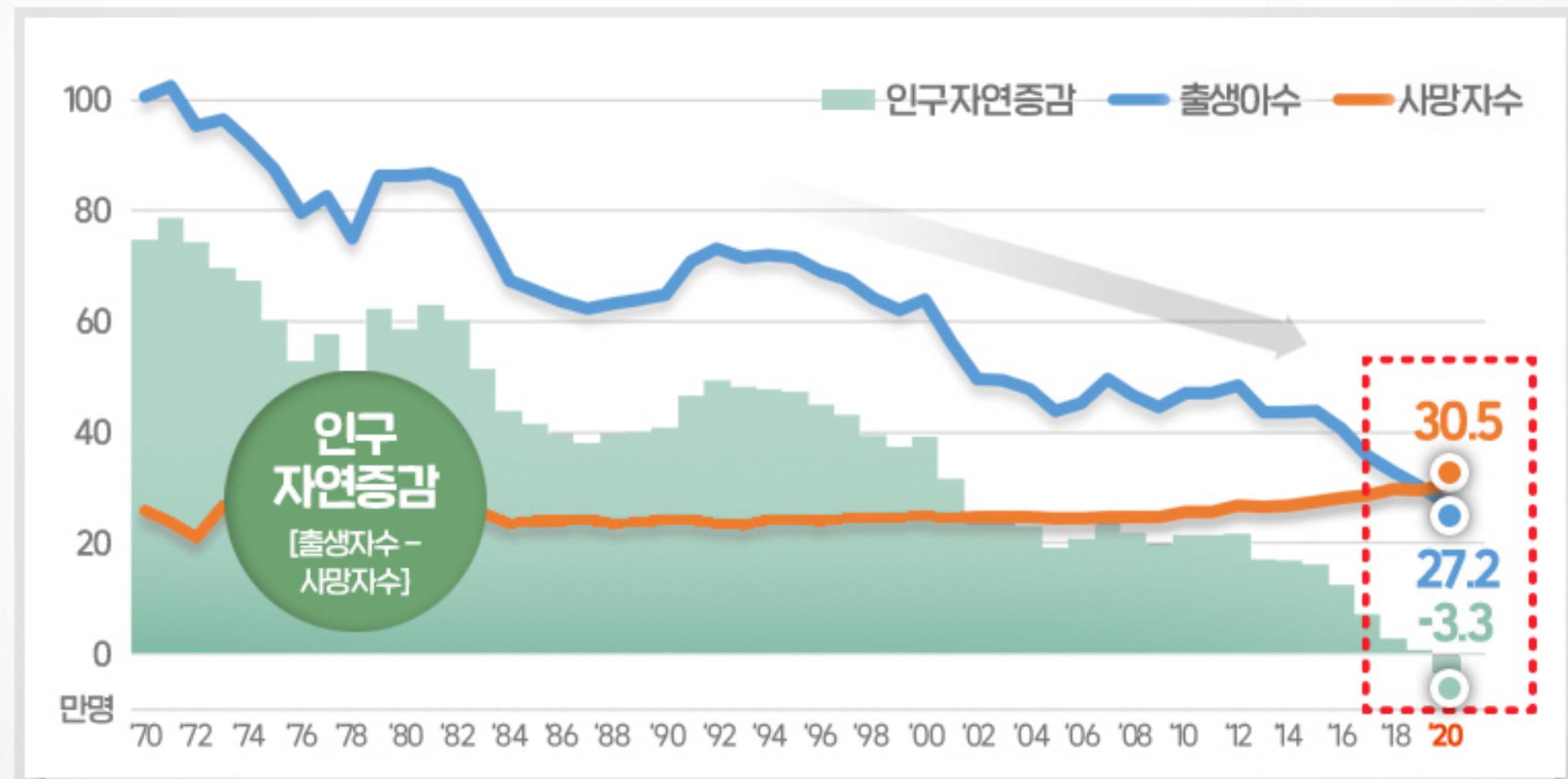
('18) 0.98 ('19) 0.92 ('20) 0.84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미만

'20년

출생자수 27.2만명
사망자수 30.5만명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기록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



부문별 축소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 비효율 발생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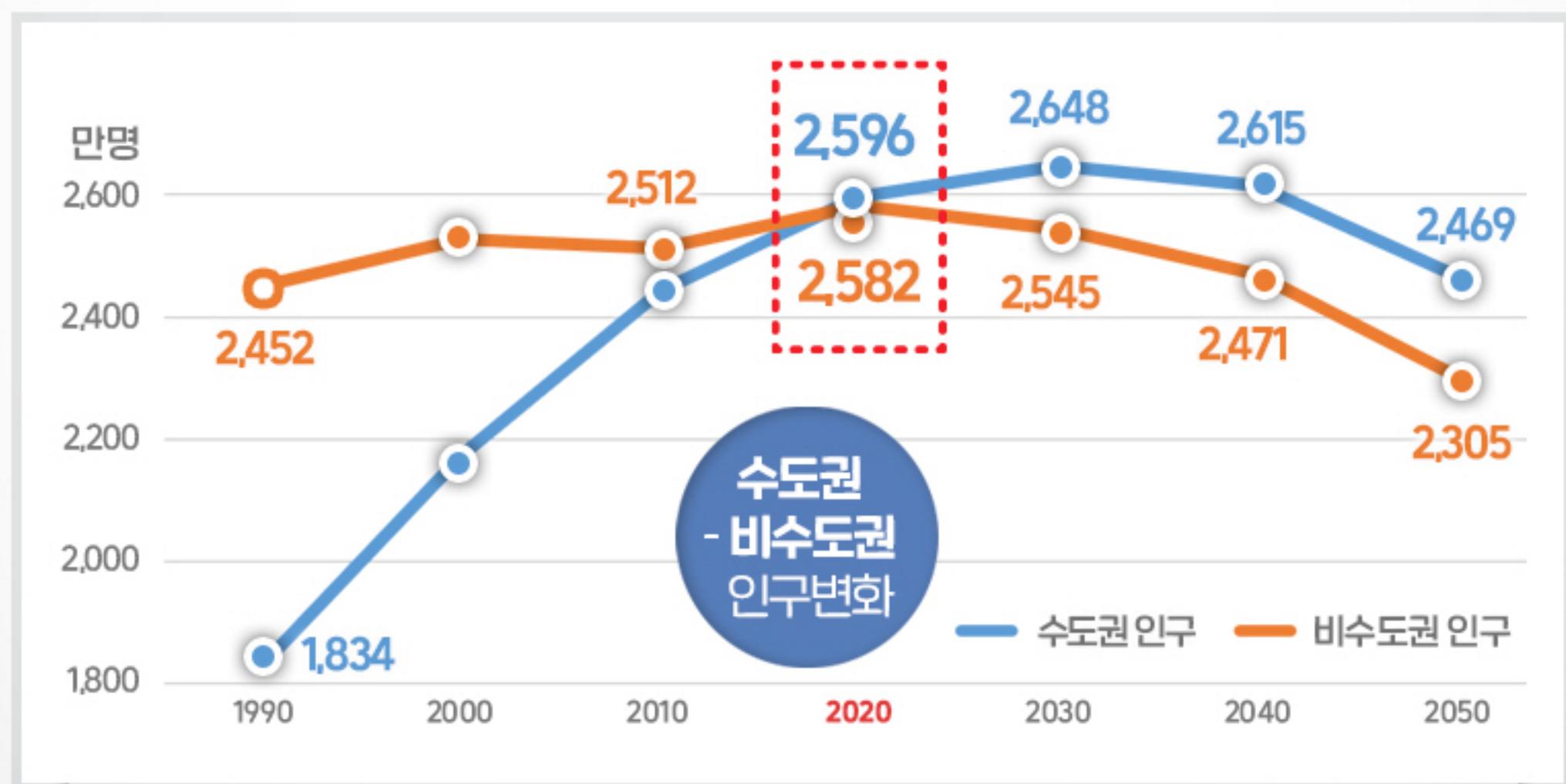
수도권 인구
('20) 2,596 만명



비수도권 인구
('20) 2,582 만명



소멸고위험지역 비중(%)
('16) 2.2 ('18) 4.8 ('20) **10.1**

**지역불균형**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13) 50.5 → ('16) 49.5 → ('19) 48.1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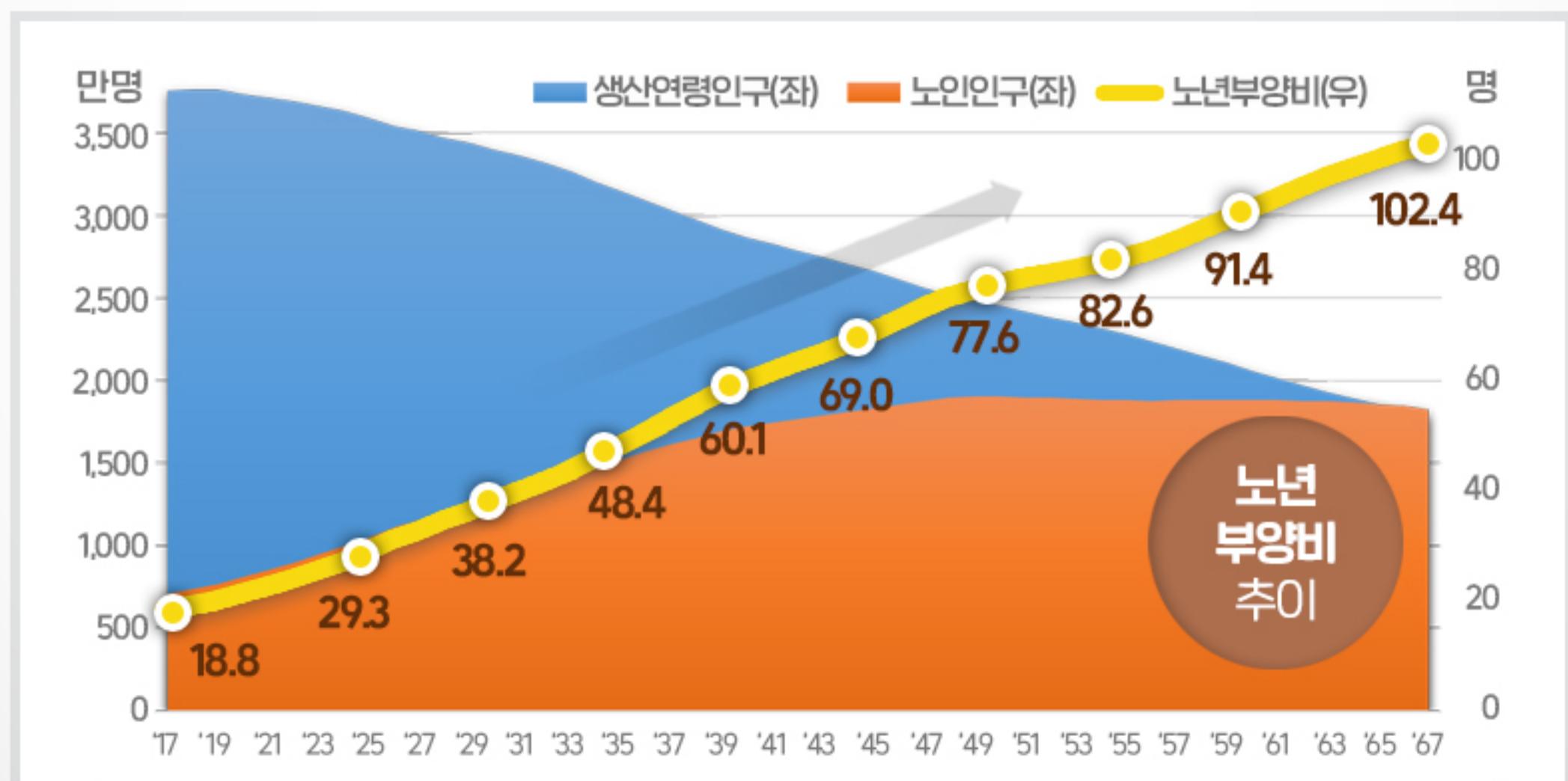
710만명
8 8 8
베이비붐세대
('55~'63년생)



은퇴 시작,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



지속 가능성 저해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건강권 보장요구** 급증
국가재정 큰 부담 초래, 요양·돌봄 분야·건강관리 분야 수요 급증

전략 1. 인구절벽 충격완화

- ✓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외국 우수 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 ✓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



전략 2. 축소사회 대응

전략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경쟁력을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 비수도권의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 및 광역화
소멸위기 지역 자립역량 강화

대학

대학의
체질개선

산업 현장

숙련인력
확보

가족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광역 거점

지역불균형
대응

소멸위기 지역

자립역량
강화

적정 규모화 유도,
폐교대학 청산
제도 마련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건강기본법상
가족 정의
확대

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수요맞춤형
초광역구계획
수립
패키지 사업
지원

전략 4. 지속 가능성 제고

-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 ▣ **고령층 건강권 보장 위해 의료 접근성 향상, 노인돌봄 체계 개편**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
자산 배분 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요양병원 수가 개편
건강생활 실천 지원 급제 추진

고령층 건강권

건강권 보장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통합 판정 체계 도입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인구정책 연구단 구성 및 운영
- 인구통계 인프라 (추계주기 5→2년 단축 등) 개선